

■ 政府施策 ■

'91年度 電機工業 施策方向

1. 총체적 기술개발 시책의 전개
2.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
3. 세계산업 및 무역질서개편 흐름에 능동적 대처
4.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
5. 노사안정에 의한 산업평화의 정착

'91년도 전기공업 시책방향

1. 총체적 기술개발 시책의 전개

○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본격추진

- 기술개발 5개년 계획 중 1차년도 사업의 착실한 추진
- 정부 및 민간의 R&D투자 확대 유도
- 산·학·연 및 정부의 유기적 협력에 의한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의 촉진
- 과학기술처로부터 이관되는 산업현장 관련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지원관리
- 기술개발자금 및 상품화를 위한 설비자금 공급의 확대

<중점개발과제>

- 전력전자기기등 첨단기술 과제
 - 배전자동화 시스템, 전력용 반도체등 첨단 핵심기술 개발과제
 - 전자기술의 접목을 통한 범용 중전기기의 첨단기술 산업화를 위한 과제
- 에너지 절약형 중전기기
 - 아몰퍼스 변압기등 에너지 저손실 첨단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전력기기
 - 전동기 속도제어장치(VVVF)등 자동제어 기술개발
 - 345KV→800KV급 승압에 따른 차세대 초고압 전력기기 개발

○국산개발품목에 대한 수요업체와의 협력강화

- 한전 등 수요기관에서 협력차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확대 유도
- 수요업체의 국산 신개발제품 우선 구매 촉진
 - 수요업체와 개발업체간 기술 및 산업 정보교환 강화
 - 전기공업협회내 국산 신개발품 사용 촉진협의회 구성

○신개발 제품에 대한 규격제정 확대

- 전기공업협회내 중전기기 단체규격 제정위원회 설치, 운영

2.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

○생산현장의 자동화, 정보화 촉진

- 현장기술 지도 및 기술정보 제공의 확대
-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
- 자동화, 정보화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, 세제 지원 확대
- 자동화, 정보화 인력의 양성 공급 확대

○발전설비 배증계획에 따른 중전기기 국산공급 설비능력 확대

- 2000년까지 19,000천 KW의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사전 준비 철저
 - 설비공급 능력 점검, 합리화 설비투자 우선 확대 유도
 - 부품업체와의 전문 계열화 체제기반 확립
- 중기구매 예시제의 예시기간 연장 및 내용의 구체화 유도
 - 소요기자재 등을 장기 구매 계획에 포함
 - 신제품의 국산개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구매 예시

○품질관리 수준의 선진화 제고

- 중전기기 전 제조업체에 대하여 공장 품질관리 등급제 실시
 - '95년까지 244업체(전 업체의 30%)를 등급공장으로 지정 목표 -- 90년도 실적 : 5개 업체가 등급공장으로 지정 받음
 - 지도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
 - 실시 결과에 따라 Incentive부여 방법 강구

- Lay Out 및 품질관리체제의 개선 유도
 - 계열부품업체 : 모기업이 기술 지도
 - 중소기업체 : 기술지도 전문기관에서 실시
- 업계에 품질관리 추진조직 설치 및 교육 강화 유도

3. 세계산업 및 무역질서 개편 흐름에 능동적 대처

-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
 -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, 중전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강화
 - 품목별 대외 경쟁력의 정밀점검 및 취약부문의 능동적 보완
 - 양허품목 및 기관의 축소와 적절한 개방시기의 선정 등 협상노력 강화
- 산업피해구제 제도의 적극 활용
 - 공정무역 또는 불공정 무역에 의한 국내 산업 피해 발생의 최소화
 - 반덤핑 관세, 상계관세 부과, 긴급수입 제한 조치 등
- 중전기기 국제산업 구조개편 정보의 수집, 분석 강화
 - 세계 주요 선발업체의 기업합리화를 위한 제휴, 합병등 동향 파악
 - 선진국의 산업이전 품목에 대한 조사 및 산업인수체제 확립
 -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보급 신속화
 - 해외 관련단체와 협력 및 교류강화
- 선진국 입찰시장 조사 분석
 - 미국, 일본 등 대규모 중전기기시장에 대한 입찰제도 및 관행 수집 연구
 - 중전기기와 건설공사와의 연계성에 대한 시장구조 조사
- 선진국 유명 규격 획득 활동확대
 -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신력 확보
 - UL, ANSI(미국), JIS(일본), DIN(서독) 등

4.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

- 정부 투자기관 구매제도의 개선
 - 한전 입찰시에 부과되는 기술도입 의무화 대상

- 품목의 단계적 축소 조정
- 에너지 손실이 적은 경제성 물품의 우선 구매제도 확대 실시

- 중전기기 시험제도의 개선
 - 국산품과 수입품, 기술도입 개발품과 자체 개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방법의 불형평 시정
 - 품질관리 우수업체의 단순한 구조변경등에 대한 시험검사 품목의 합리적 축소
 - 시험설비 확충으로 검사 기능의 강화
-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자유경쟁체제 도입 확대
 - 단체수의계약 품목의 점진적 축소 조정
 -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거나,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고, 안전성이 특히 요구되는 품목등을 대상
 - 해제기간이 예시되어 있는 고유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
 -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이양 권고 강화
 - 생산, 설비 자동화 자금의 우선 지원
 - 공업기반기술 과제 및 국산개발 품목으로 집중 도출하여 기술개발 지원
- 기술개발자금 추천기관의 합리적 조정
 - 전기공업분야에 대한 공업발전자금,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의 기술개발자금 추천기관을 전기공업협회로 조정

5. 노사안정에 의한 산업평화의 정착

- 업종별 임금 및 단체협약의 공동교섭 또는 시기 통일 추진
 - 전기공업협회내 '산업평화 협의회'구성
- 생산현장의 노사화합 저해요인 개선
 - 생산문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후 대책 수립, 보급
- 생산직에 대한 인사제도의 획기적 개선
 - 근로자의 직제 확대로 장기근속 근로자의 승급, 승진 기회 제공
- 근로 기풍의 진작
 - 기업내 집단 복지의 강화
 -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평생직장 풍토 조성
 -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